

	보 도 자 료	
	작성	국토계획·지역연구본부 이우진 부연구위원(044-960-0169)
	배포	홍보팀 김지형 3급행정원(044-960-0582)
보도일시	■ 즉시 보도 가능	

“독일의 국가균형발전정책, ‘동등한 삶의 질’ 내용 및 시사점”

국토연구, 국토이슈리포트 제 84호

-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정(23.7.10)과 「지방시대 종합계획(2023~2027)」 수립(23.11.1)에 따라 기존에 분리하여 시행하였던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유기적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과 정책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어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.
 - 중앙정부는 ‘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’ 라는 비전하에 지방정부의 주도로 국가 발전과 국민의 행복이 증진될 수 있도록 균형발전과 책임 있는 지방분권 실현을 목표로 설정
- 국토연구원(원장 심교언) 이우진 부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 『독일의 국가균형발전정책, ‘동등한 삶의 질’ 내용 및 시사점』에서 연방국인 독일이 2019년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새롭게 도입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‘동등한 삶의 질’을 소개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.
 - (정책의 차별성) 통일 이후 구동독을 대상으로 국가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던 기존의 지원 체계를 30년 만에 독일 전역으로 확대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거주지에 영향을 받지 않고 발전과 참여의 기회를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대대적 변화 추진
 - ※ 통일 이후 구동독을 중심으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 집중되어 나타났으나, 사회적 변화에 따라 경제적·산업적 구조가 취약한 지역이 구서독지역으로 확산하여 독일 전 지역을 지원할 새로운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됨
 - (정책의 주요 내용) ‘동등한 삶의 질’ 정책은 총 12가지 중점과제와 자원의 공정한 배분, 지역 간 격차 해소, 기존의 긍정적인 행정 및 경제구조 유지, 도시지역의 사회적 문제 경감, 사회 통합 및 연대 강화와 같이 5가지 전략으로 구성되었으며, 세부적으로 6개 관계부처의 22개 사업을 지원함
 - ※ 관계부처는 연방경제에너지부(BMWi), 연방내무건설국토부(BMI), 연방식품농업부(BMEL), 연방교통디지털인프라부(BMVI), 독일연방교육연구부(BMBF), 연방내무건설국토부(BMI)로 구성

〈표 1〉 연방정부의 동등한 삶의 질 실현을 위한 12가지 중점과제

① 독일 전 지역의 지원대상지역을 선정하는 새로운 지원 시스템 구축	⑦ 지방정부의 부채에 대한 공정한 해결방안 마련
② 경제력 취약 지역, 인구감소지역, 접근성 취약지역 등에 일자리 창출	⑧ 참여와 봉사활동 강화
③ 전국 광대역 인터넷망과 이동통신망 확대	⑨ 어린이 돌봄 서비스의 품질 확보와 참여기회 확보
④ 지역의 이동성 및 교통 인프라 개선	⑩ 장애인 친화지역 실현
⑤ 도시개발사업 지원과 사회주택 건설 촉진	⑪ 지방 시민들의 상호 협력 촉진
⑥ 시골 마을과 농촌지역의 역량 강화	⑫ ‘동등한 삶의 질’을 독일 모든 지자체 정책의 기준으로 지정

출처: BMI et al. 2021, 8-9를 참조하여 재작성.

□ 연방정부는 12가지 중점과제 중 독일 전 지역의 지원대상지역을 선정하는 새로운 지원 시스템 구축을 가장 먼저 수행함으로써 ‘동등한 삶의 질’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략적 지원 체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.

- (관계부처의 협력 체계 구축) ‘동등한 삶의 질’ 정책과 관련하여 6개 부처의 총 22개 사업(기존 사업과 새롭게 개발한 사업 포함)을 새로운 지원 시스템 아래로 취합함
- (우선지원지역 설정) 새 지원 시스템은 연방정부와 연방주가 50년 이상 실행해 온 ‘공동 과업-지역경제구조개선사업(이하:GRW)’ 에서 선정한 지역을 ‘동등한 삶의 질’ 정책에 그대로 적용하여 22개 사업을 추진할 우선지원지역으로 지정함
- (GRW 사업) 경제력이 낮은 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 혹은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행정구역 대신 기능지역인 노동시장지역을 지역의 경제활동 및 장소조건 분석의 경계로 설정함

□ 독일의 균형발전정책 ‘동등한 삶의 질’ 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.

- [사업 추진 체계] 국가 차원에서 동등한 삶의 질 정책의 효율적 사업 추진 및 집중적 투자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
연방정부와 연방주 차원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지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계부처의 사업이 필요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음
- [공간 분석] 동등한 삶의 질 정책은 행정구역 대신 노동시장지역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지역을 분석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활동 및 장소조건을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노력
연방정부가 공간 분석 시 기능지역을 활용한 것은 전통적 행정구역과 같은 지리적 경계만으로는 지역 간의 경제구조 차이를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
- [파트너십 구축 환경] 지역경제 활성화, 산업구조 전환 등을 위한 사업과 연구 추진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에 공간적 경계를 제한하지 않고 지원
물리적·공간적 기준의 연계보다는 지역에 혁신적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유연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어 다른 지역의 파트너에게도 같은 수준의 지원을 제공함



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연구원 홍보팀 김지형 3급행정원(☎044-960-058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